

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**검 토 보 고 서**

【김지연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11. 21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

##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경 과

의안 제653호로 2025년 11월 7일 김지연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관내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, 더 나아가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제명변경: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조례

나. 목적 및 정의 변경(안 제1조, 제2조)

다. 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변경(안 제3조, 제4조)

라. 위탁 및 지원, 센터의 사업 변경(안 제6조, 제7조, 제9조)

마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맞춤법을 정비함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5. 11. 7.~2025. 11. 13.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□ 개정 배경 및 취지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제1항, 제30조제1항, 제35조제1항, 제53조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 조례를 제정·시행(2014. 2. 27.)해 왔음.
- 한편, 2020년에 실시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, 시설 거주자의 69.5%가 ‘현재 생활이 좋아서’ 시설에 남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나,
  - ‘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’(21.9%), ‘경제적 자립이 자신 없어’(14.7%), ‘가족이 원해서’(9.7%), ‘함께 살 가족이 없어서’(4.8%) 등 지역사회 정착 기반의 부족으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는 경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.
  - 이는 시설 외 생활을 희망하면서도 지역사회에서의 주거·일상·

사회참여 기반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임.

-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착까지 포괄하는 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,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서비스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을 강화·확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#### □ 주요 내용으로

-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.
  - 이는 단순히 자립생활에 그치지 않고,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1조(목적)는 기존의 “자립생활 지원”을 “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”으로 확대하고, “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”, “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”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,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정의 추진 방향을 보다 확대·구체화한 것임.
- 안 제2조(정의)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골자인 “지역사회

정착”를 “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, 일상생활, 건강, 사회참여 등을 자립적으로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.”로 적절히 규정함.

- 안 제4조(계획수립), 제7조(위탁 및 지원) 및 제9조(센터의 사업)는 제명과 목적에 맞게 조문 내 용어를 “자립생활”에서 “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”으로 변경함.
- 안 제6조(지원사업)는 “주거” 관련 지원사업으로 기존 “주거 환경 개선 지원”에서 “자립생활주택·주거지원서비스 지원”까지 확대하였으며, 이를 통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, 지역사회 내 실질적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함.
-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함.

## 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‘자립생활 지원’에서 ‘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’으로 확대함으로써,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지원사업으로 주거지원서비스·자립생활주택 지원 등 구체적 주거지원 내용을 확대함으로써, 장애인의 실질적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# 참고 자료

## 1

## 장애인복지법

**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**제3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**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,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,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**제35조(장애 유형·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·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3조(자립생활지원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,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